

인천研 “시, 중기 탄소중립 대응책 절실”

인천 제조업 탄소중립 대응안 연구 발표

지역 중기 대상 교육·홍보 필요 강조 “정부 협력으로 지자체 차원 지원해야”

인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연구원은 ‘인천시 제조업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 연구’ 결과보고서를 통해 “중소기업 대부분은 탄소중립 개념이나 목표, 이해가 전반적으로 낮고, 대응 계획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라고 26일 밝혔다.

인천연구원은 “EU(유럽연합) 대상 수출업

체나 ‘RE100’ 선언 대기업 협력사도 큰 차이가 없었다”며 “탄소중립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역 중소기업 대상 교육과 홍보가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2021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를 상향하면서 산업 부문 탄소 배출 감축 목표도 대폭 올렸다.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2억 2260만톤CO2eq으로 감축한 뒤 2050년 5110만 톤CO2eq까지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인천 제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0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 주춤했다. 2019년 기준 전체 배출량은 18만 3600톤CO2eq으로, 업종별로는 석유정제품 제조업, 1차 철강 제조업,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순으로 많았다.

단조 산업 부문 탄소 배출 감축은 중앙정

부 관할이지만, 목표관리제나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역할이 병행돼야 한다는 게 인천연구원의 설명이다.

인천연구원 한준 연구위원은 “중소기업 탄소중립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협력을 통해 정보 공유나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특히 탄소중립 과정에서 피해를 받는 업종, 기업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선적으로 지역 내 EU 대상 수출업체나 국내 RE100 선언 대기업 협력사에 대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 중앙부처와 협력해 이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 현황 파악 및 탄소중립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경욱 기자

인천시·시교육청, 종합청렴도 나란히 3등급 ‘중위권’

국민권익위, 청렴도·부패방지 종합 평가

인천교통공사·인천시설공단 ‘2등급’ 옹진·강화군·인천경찰청은 ‘하위권’

지난해 인천시의 종합청렴도가 3등급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개 군·구 중에서는 강화군이 4등급으로 가장 낮았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종합청렴도(1~5등급) 등급표에 따르면 인천시는 청렴체감도 4등급, 청렴노력도 2등급으로 종합 3등급을 기록했다.

인천의 종합청렴도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서울시, 부산시, 경기도와 같은 수준이었다. 이외 경상남도와 경상북도, 전라남도, 광주시, 제주시가 2등급으로 나타났으며 1등급은 없었다.

국민권익위는 기존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

지 시책평가를 통합한 새로운 종합청렴도 평가체계를 수립해 2022년부터 적용했다.

지난 1년간 15개 유형, 모두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직자·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체감도’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진행해 각 영역별 결과를 합산 후 기관별 종합청렴도를 측정했다.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를 더하고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한 결과다.

인천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는 각 4등급, 3등급으로 집계됐다. 교육청의 종합청렴도 1등급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유일했다. 2등급에는 대구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울산시교육청, 제주시교육청 등이 포함됐다.

인천 10개 군·구의 종합청렴도는 남동구·연수구 2등급, 계양구·동구·미추홀구·부평구·중구·옹진군 3등급, 강화군 4등급 순이었다.

인천에 있는 공기업 종합청렴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2등급, 인천항만공사 3등급이었다. 1등급에는 부산항만공사와 한국남동발전 2곳만 있었다.

인천시 산하 공기업 중에는 인천교통공사와 인천시설공단이 2등급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공기업 중 1등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상위권에 위치한 셈이다. 인천도시공사는 3등급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의 종합청렴도는 4등급으로, 2등급인 서울경찰청과 3등급인 부산경찰청 등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천대학교의 종합청렴도는 2등급이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평가 결과는 향후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청렴수준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리고 국민과 공직자 모두에게 신뢰받을 수 있도록 개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경욱 기자

남동구,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맞춤형’ 지원 방안 모색

區, 특별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 긴급 생계지원 등 지원 체계 강화

인천 남동구가 복지 위기가구 발굴 추진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2주 동안 특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박종호 구청장은 지난 25일 국·실장, 동장 등 40여 명과 민생 안전 현안 회의를 갖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집중 발굴해 긴급 생계지원, 맞춤형 수급자 신청 등 지원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대상은 지난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당시 보고된 특이사항 세대와 주거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만 30~64세 중장년 1인 세대 및 중복장애 등 위험 요인 세대다.

이번 사실조사는 각 동장 책임 하에 팀별 통합조사반을 구성하고, 상황에 따른 복지서



지난 25일 인천 남동구청 은행나무홀에서 진행된 국·실장회의 및 현안사항 전달회의에 박종호 구청장과 각 국·실장, 동장 등이 참석했다.

남동구 제공

비스를 연계한다.

박 구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홀몸노인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 방문, 난방비 지원 대책, 폭설 대비 비상근무 체계 유지, 선제적 연하갈습 확보 등도 지시했다.

또 올해 약 250여 명 증가한 노인 일자리 사업 확대와 함께 사업 참여 노인들의 안전

확보, 소규모 공원 쉼터 조성을 위한 사업지 발굴 등의 사업 추진에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강조했다.

박종호 구청장은 “이번 특별 사실조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도록 노력해주시 바란다”고 말했다.

박지현 기자

市,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폭 ‘확대’

대학원생 신규·미취업 졸업생 5년까지… 2월 15일부터 신청

인천시가 대학(원)생들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금 이자 지원을 확대한다.

시는 한국장학재단에서 대출받은 대학(원)생 학자금대출(등록금·생활비)의 이자 지원 대상자를 다음달 15일부터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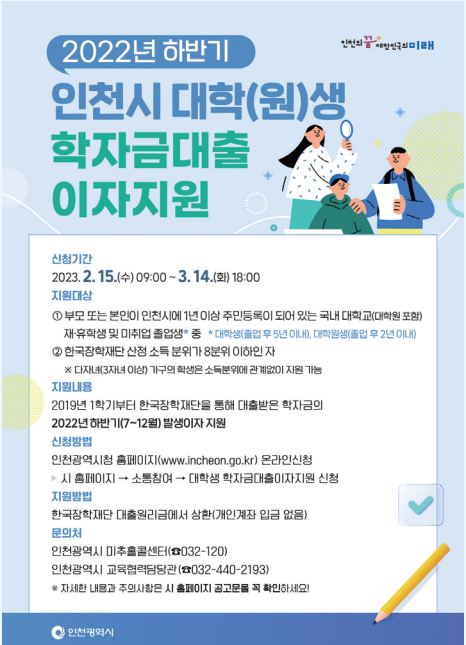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생을 신규로 지원하고, 미취업 졸업생 지원기간도 2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한다.

신청·접수 기간은 다음달 15일 오전 9시부터 3월 14일 오후 6시까지다. ‘시 누리집(www.incheon.go.kr)→소통참여→대학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대학(원) 졸업생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다. 다자녀가구(3명 이상)의 자녀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내면 된다.

대출이자 지원 여부와 금액은 오는 5월 말 확정해 대출계좌와 상환처리 형태로 지원된다.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에서 대출계좌와 별 지원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접수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밖의 문의사항은 미추홀콜센터(032-120)나 시 교육협력담당관실(032-440-2193)로 연



인천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사업, 인천시 제공

락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2019년 1학기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지난해 하반기(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이 지원된다.

지원대상은 부모 또는 본인이 1년 이상 계속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또 국내 대학교(대학원 포함) 재·휴학생과 미취업 졸업생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산정하는 가구소득 8분위 이하 또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여야 한다. 대학생은 졸업 후 5년 이내, 대학원생은 졸업 후 2년 이내까지 지원된다.

조경욱 기자

아인여성병원, 지역사회 올바른 성인식 함양 앞장

지역교육 발전 공로 인정 교육감 표창 학생들 대상 다양한 성교육 등 실시

아인의료재단 아인여성병원의 구자남 원장, 강규현 기획조정실장, 김선일 마더비문화원 과장이 인천시교육감 표창을 받았다.

26일 아인여성병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역사회에서 올바른 성인식 함양을 위한 특강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지난해 11월에는 강규현 산부인과 전문의 기획조정실장이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피임 방법, 성병 예방법 등의 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온·오프라인을 통해 수차례 강의를 벌였다.

김선일 마더비문화원 과장은 예비 엄마부터 예비 학부모까지 부모를 대상으로 한 ‘양육 코칭’ 강좌로 나이대별 특성에 따른 육아 강의 프로그램을 해마다 운영하고 있다.

이밖에 본원은 유니세프와 조목유산 어린이재단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후원, 미혼모 시설



(왼쪽부터)아인여성병원 김선일 마더비문화원 과장, 구자남 원장, 강규현 기획조정실장이 인천시교육감 표창을 수상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인여성병원 제공

정기 후원 등으로 지역사회 공헌 활동도 해가고 있다.

아인여성병원은 올해도 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인천 미추홀구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교육 전문 간호사가 임신, 생리, 피임 등에 관한 교육과 부모를 위한 다양한 자녀 양육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윤용해 기자

옹진군, 찾아가는 검진 서비스로 ‘군민건강’ 확보

2월7일 북도면 시작으로 순차 실시 37개 항목에 만성질환 합병증 검사

인천 옹진군은 2월 7일 북도면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군은 의료 접근성이 낮아 정기적인 검진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건강관리를 위해 찾아가는 건강검진을 추진한다.

건강검진은 만 20세 이상 옹진군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골밀도 및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 등 37개 항목과 만성질환 합병증(백내장, 실명 등) 검사인 안저·안압 검사를 진행한다.

올해 주민건강검진과 안저·안압검사 이후 만성질환 유소견자는 방문 건강관리 대상자로 등록하고 관리할 계획이다.

검진 일정은 ▲2월 7~8일 북도면(산·시·모도)



옹진 군민이 ‘찾아가는 주민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검진을 받고 있다. 옹진군 제공

▲2월 9~10일 북도면(장봉) ▲7월 4~11일 백령면 ▲7월 12~15일 대청면 ▲7월 20~26일 연평면 ▲8월 8~11일 영흥면 ▲8월 17~18일 자월면 ▲8월 22~25일 덕적면 ▲8월 29일 자월면(소·이·작) ▲8월 30일 자월면(대·이·작) ▲8월 31일 자월면(승·봉) 순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김민지 기자

시,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생활화’ 당부

30일부터 실내 착용 권고로 조정

인천시는 오는 30일부터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되더라도 일상에서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국내 유행 감소세, 검역·감시체계 운영 등을 고려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일부터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되며 ▲유증상자·고위험군인 경우 ▲유증상자·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2주간 착용) ▲환기가 어려운 3밀 환경 ▲다수 밀집·비밀생성 환경인 경우 마스크 착용이 강력히 권고된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등 감염취약시설에선 기존대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이나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김문수 시 감염병관리과장은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조정된다고 해서 안심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닌 만큼 내 가족과 이웃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